

# 광주 화정2구역 환경개선사업 법정공방

사업비 900억원 규모의 광주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광주 서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10여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월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화정2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3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2016년 9월7일 광주시와 서구청,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판 바 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민들은 지난 2006년 1월 당시 화정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광주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5분의 1 이상인 지역, 정비대상 구역 내 너비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 이상인 지역 이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주시도 이를 근거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71.4%, 4m 미만 도로 비율 42.8%에 달하는 화정2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도 광주시의 판단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광주시가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무조건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거가 불가피한지,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준공 연수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했다.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4m 미만 도로 비율 42.8%에도 허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주택의 마당으로 쓰이고 있는 땅을 도로로 계산해 넣거나 실제 8m가 넘는 도로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 같은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

## 내달 8일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주민 동의율·절차 적법 여부에 희비

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 동의를 받아낸 서구청은 75.6%가 사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은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2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 7명이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동의서 작성 명의자

란에 '정00 외 1인'으로 기재돼 있고 서명은 '정00'만 돼 있다. 이를 서구청은 동의서 두 장으로 구분했다.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대리 서명한 동의서도 있다. 증대하고 명백한 허자가 발견된 것만 7명이다. 이를 빼면 동의율이 3분의2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정 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김옥수 서구의원 "해당 사업은 2012년 12월27일 이미 만료됐다. LH는 당시 공사를 추진조차

못했다. 서구청은 이미 지급했던 기반시설공사비 23억여원의 2배를 추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한 사유와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 기간을 2019년 8월30일까지 연장했다.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의 하자 여부 등인데 원고 측은 이미 1심에서 패소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지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수문장과 여인들 24절기 중 마지막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한' 이지만 한파 풀린 날씨를 보인 20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계속되는 광주 불법 광고 현수막과의 싸움

광주 기초자치단체가 올해도 불법 광고 현수막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광주 5개 구청이 단속을 벌여 거둔 불법 광고 현수막은 2만장을 넘었다.

특히 북구는 올해 1일부터 17일까지 1만3000장의 불법 광고 현수막을 수거했다. 5개 구청 전체 단속의 65%나 된다. 시간제 인력 5명, 단속 차량도 1대를 늘린 결과지만 주말 동안 편법적으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은 손보지도 못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현수막의 80~90% 가량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 광고다. 올해 단속된 현수막도 마찬가지로는 5개 구청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광주 동구 모 지역주택조합은 분양 광고로 내건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16억원이 넘었다.

구청 한 담당자는 "16억원을 납부해도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더 많다"며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건수는 지난해 서구 28만9258개, 북구 24만 7065개, 광산구 5만개에 달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분의 또는 20분의 1에 못 미친다.

단속은 하는데 과태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속해이할 인력이 부족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진 등 첨부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이홍규 기자

## "때렸는데 죽은 것 같다" 30대 남성 체포

30대 남성이 여성을 차안에서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5분께 광양 중앙동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33·여)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에 발견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얼굴에 멍과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 B(38)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안에서 때렸는데 죽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A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는데 의식을 잃고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장흥서 승합차가 사고난 승용차 뒤에서 추돌

20일 오전 12시23분께 장흥군 장동면 한 도로에서 쏘렌토 승합차가 1차 사고가 난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운전자 배모(41)씨가 숨지고 쏘렌토 운전자 최모(59)씨와 동승자 4명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랜저 운전자 배씨는 119가 현장 구조 당시 심장 정지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편도 2차선 도로 위에서 1차 사고를 단독으로 낸 그랜저 승용차를 뒤 따르던 쏘렌토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흥=김홍필 기자

## 행인 습격한 뒤 차에 보도블록 던진 50대 검거

돌맹이로 행인의 머리를 내리친 뒤 보도블록으로 차량을 파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돌맹이로 행인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박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광주 남구 한 은행 앞 길에서 A(55·여)씨의 뒤를 추월하다 돌맹이를 던져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숙자인 박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출동 경찰관과 대치하는 과정에 맞은편 도로 쪽으로 보도블록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박씨는 경찰에 "누군가를 죽이고 (자신도)죽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체포 당시 양손에 보도블록과 돌맹이를 들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돌로 길을 건너 여성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주택 마당서 40대 여성 진돗개에 물려

광주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렸다.

19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16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 마당에서 진돗개(백구)가 A(45·여)씨를 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왼쪽 종이에 2cm 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친구집을 찾았다가 마당에 묶여있던 진돗개에 물렸으며, 경미한 부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남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반려견 소유자는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